

한국불교계의 종단 난립 원인과 문제점 분석*

차차석**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불교계의 종단 증가 현황
- III. 종단 난립의 원인과 문제점
 - 1. 종단 난립의 원인
 - 2. 종단 난립의 문제점
- IV. 나가는 말

* 이 논문은 2017년 12월 2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개최된 ‘아시아종교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 교수.

© 『大覺思想』 제29집 (2018년 6월), pp.301-323.

한글요약

이 논문은 한국불교계의 종단난립과 그 원인,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신흥종단은 현재 5백여 개의 종단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새로운 종단이 파생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1988년 이전에는 18개에 불과하던 불교계의 종단이 급증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일은 더없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종단이 짧은 기간에 급증하게 된 원인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네 가지 정도로 분석한다. 첫째는 한국불교를 대표한 정통종단인 조계종과 태고종의 갈등과 분열이다. 둘째는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의 폐지와 동시에 종단을 수립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후 신흥종단이 급증하게 된다. 셋째 각 종단의 인사 및 재무관리가 전근대적이란 점이다. 이에 따라 이해가 충돌하면서 분파의 여지를 만들게 된다. 넷째 무속계통의 종단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巫俗人들을 따르는 신도들을 중심으로 불교계의 신흥종단으로 활동하는 점 등이다.

신흥종단이 등장하는 것은 새로운 불교운동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신도들의 건전한 신행활동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점, 불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는 점, 불교의 무속화로 사회적 악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신흥종단이 난립하고 있지만, 이들이 불교적인가 하는 점에서 불교적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요인 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불교에 대한 사회적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불교계의 각 종단이 유의하지 않으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불교의 정체성, 분규, 불교재산관리법, 신흥종단, 신뢰감, 종교정책, 이승만, 무속, 사회적 왜곡, 역기능

I. 들어가는 말

현재의 시점에서 말하자면 한국불교는 매우 많은 신흥종단이 발생하고 있다. 신흥종단의 난립시대에 봉착해 있다. 1988년 이전, 조계종과 태고종을 비롯해 18개 종단으로 지칭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종단의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종단이 출현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불교는 국가의 통제 속에 그 역사를 이어왔다. 한국불교의 역사가 정치에 예속된 이유를 무엇이라 평가하던, 동북아불교의 전개 속에서 시대적 역사성을 지닌 종단이 출현해 그 법맥을 계승했다. 조선시대 들어와 등장하는 儒敎立國과 반불교정책은 많은 종파를 선교양종으로 통합했으며, 조선 후기까지 그 전통을 이어왔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開港期 이후와 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선교양종을 통합한 통합불교를 표방하는 남종선의 일방적 구도를 파괴하게 된다. 돌이켜보면 해방 이후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기되기 이전에는 정부의 보이지 않는 통제 하에 새로운 종단의 출현이 쉽지 않았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통불교를 지향하는 한국불교의 특성이 새로운 종파불교의 출현을 억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이외에도 정치적인 상황이 새로운 불교종단이 출현할 여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양한 상황이 새로운 종단의 출현을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종단의 출현을 다양성이나 창의성, 시대적 요청이나 새로운 구원론의 등장이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구원론이나 수행론을 제시하며 시대적 종교문화의 흐름을 승화시키고자 하는 종단이 다수 출현한다면 바람직한 현상이라 평가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많은 종단의 출현이 한국불교의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다수 종단의 불교적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불교발전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종파불교에서 宗이란 단어가 지니는 의미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종이란 주의 주장이며, 그 주의주장은 불교에서 최고의 가치라 생각되는 수행론이나 구원론을 내세우는 것¹⁾이다. 따라서 특별한 주의주장에 동의하는 신도와 제자들이 단합하여, 그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게 되며, 이것을 종파불교라 말한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서 한국불교계에 수많은 종단이 출현했지만 어떠한 수행론과 구원론을 제시하여 시대적 난제와 대중적 고민을 구제하고자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종지는 무엇이고, 그러한 종지를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일꾼(승려 혹은 신도)을 교육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별한 종지와 불교적 수행론이 제시되지 않는 종단의 출현이 횡행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서 종단난립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단순히 한국불교계의 병폐를 진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의 사회적 병리현상의 일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한국종단협의회와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등의 홈페이지 나타난 가입종단의 숫자와 기타 자료에 나타난 종단 통계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면서 종단 난립의 원인과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불교계의 종단 증가 현황

현재 한국불교계가 종파난립의 현상은 보이고 있지만, 새로운 종단의

1) 차차석 편, 『중국의 불교문화』, 서울: 운주사, 2007, p.97.

출현은 그 연원을 소급하면 1920년대에 그 단초를 살펴볼 수 있다. 무라야마가 조사한 『조선의 유사종교』에 이미 ‘재래의 조선불교와 다르되’ 그러나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유사종교²⁾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가 살펴보고자 하는 종단 난립은 해방 이후 발생하는 재래불교의 분열과 그것을 기점으로 파생되는 무수한 신생종파의 난립이다. 즉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분열하는 조태분규를 계기로 이후 수많은 종단이 지속적으로 난립하고 있다. 이러한 종단의 난립이 한국불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불교적,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해방 이후 사회적 혼란과 많은 신생종단의 출현은 조태분규를 계기로, 각 종단을 통제할 정부의 필요성에 의해 「불교재산관리법」을 제정하며, 이에 따라 신생 종단은 정부에 등록해야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었다. 이에 당시 제도권에 편입된 종단을 중심으로 종단 친목단체인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를 결성하게 된다. 결국 이 단체의 발전을 보면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기 이전의 제도권 불교종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종단협 홈페이지(www.kboa.or.kr)를 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서기 1967년 5월 이청담(조계종), 박대륜(태고종), 김운운(법화종), 김혜공(진각종), 이홍선(관음종)과 최영희, 김선규 등 국내 불교계 대표 7명이 모여 불교계의 대동 단합과 총화를 기하고 호국불교의 사명을 다하고자 대한불교총연합회를 발기하고 1969년 3월에는 12개 종단 대표 발기인 200명이 모여 한국불교총연합회를 창립했습니다.

1973년 10월, 19개 종단 대표자 및 지도자 300명이 모여 한국불교총연합회와 한일불교 친선협회를 통합한 한국불교회를 결성하여 조직이 확대된 후, 1974년 대한불교총연합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다시

2) 村山智順, 『朝鮮의 類似宗教』, 조선총독부, 昭和10, pp.35-433. 여기에는 불교계 유사종교를 조사 보고하고 있다.

1980년 11월 한국불교종단연합회로 명칭을 바꾸고 1989년 현재의 명칭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되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012년 8월 현재 27개 회원종단으로 확대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소속종단을 소개하는 곳에서는 29개 회원종단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 현재까지 홈페이지를 교정하지 않아 생긴 오류라 본다. 결국 67년 5개 종단연합단체에서 출발해, 69년 12개 종단으로 확대되고, 73년 19개 회원종단으로 증가하며, 2012년 27개 종단으로 회원이 증가했다. 이후 종단협의 연혁을 소개하는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2017년 11월 현재 29개 회원 종단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단협에 가입된 종단은 이상과 같거니와, 크게 분류하면 전통불교를 대표하는 선종계열, 밀교계열, 법화천태계열, 미륵계열, 정토계열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단들은 동북아불교의 전통 범위 안에 속한다. 그렇지만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기 이전에도 신생종단은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고 본다. 그것이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신해 「전통사찰보존법」이 시행되면서 종단은 갑작스럽게 증가된다. 「불교재산관리법」에 묶여 있던 사찰의 매매나 양도가 가능해 졌기도 하지만, 종단의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법인격을 갖추면 어느 단체나 종단으로 행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무렵 이미 66개 종단이 출현한다.³⁾ 결국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기 이전에는 불교계의 종단등록이 암묵적인 국가의 관리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신생종단의 출현이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보통 18개 종단이라 지칭했으며, 이것은 국가의 승인으로 체계를 갖춘 종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강오는 1992년 발간한 『한국신흥종교총람』에서 한국불교계의 99개 교단의 성격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⁴⁾ 국내 기성 불교를 바탕

3) 김방룡, 「해방후 한국불교의 분열과 신생종단 성립과정」, 『종교문화연구』 제3호, 2001, p.299. 김방룡은 1997년도 BBS불교방송에서 발간한 『97불교뉴스연감』을 참고하고 있다.

으로 형성된 교단, 신흥종교를 바탕으로 형성된 교단, 계통불명의 교단, 외국에 뿌리를 둔 교단 등이다. 이 중에서 신흥종교를 바탕으로 형성된 교단 속에 동학계열, 남학계열, 증산교계열, 각세도계열, 봉남교계열, 단군교계열, 무속승신계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1997년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신흥종교실태조사보고서』⁵⁾에서는 56개 불교계 종단의 계통적 성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90년대 하반기에는 이미 백여계의 종단이 불교계에 출현했거나 이미 출현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2008년도에 발간된 『한국불교총람』에 의하면, 한국불교계에 155개의 종파가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 책에는 비교적 각 종단에 관한 내용이 보고되어 있다. 다만 이 자료는 2007년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한 것⁶⁾이다. 『한국불교총람』(2008)에 의하면 불교계 종단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과 미가입 종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불교총람』(2008)에 기재되어 있는 종단을 계통이나 사상적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⁷⁾ 즉 선종계열 45개 종단, 법화계열 13개 종단, 미륵계열 9개 종단, 정토계열 9개 종단, 밀교계열 2개 종단, 화엄계열 6개 종단, 기타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국제불교일화종이나 대한불교선화종 등의 44개 종단이 있다. 다만 종단의 명칭에 의거해 본다면 선종과 유관한 신생종단이 많다. 조계, 임제, 달마, 선, 법안 등의 명칭은 역사적으로 선종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조계라는 글자가 종명에 들어간 종단도 19개 정도이다.

이상에 소개한 종단과 중첩되는 것도 있지만 2010년 BBS 불교방송에

-
- 4) 이강오 저, 『한국신흥종교총람』, 한국신흥종교연구소, 1992, p.588 이하 참조.
 - 5) 김홍철, 류병덕, 양은용 공저, 『한국신흥종교실태조사연구보고』,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7, pp.459-594.
 - 6) 『한국불교총람』, 서울: 대한불교진흥원, 2008, p.26.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은 많은 숫자의 종단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내용은 『한국불교총람』보다 못하다. 그런 점에서 분석의 기초자료가 아닌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 7) 『한국불교총람』, 서울: 대한불교진흥원, 2008, pp.80-111.

서 발간한 『2010 불교정보』에는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⁸⁾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근본불교조계종이나 대한불교무량종, 대한불교증생종 등 『한국불교총람』에 보이지 않던 종명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조계종이란 명칭이 들어간 종단이 늘어나고 있다.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중심종단이다 보니, 조계종을 사칭한 종단이 늘어났다고 본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2년 3월에 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에 의하면 한국불교계는 여전히 수많은 신생종단이 파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자료에 의하면 연락처가 확인된 불교 종단은 265개였으며, 그 가운데 137개 종단의 현황을 파악해 소개하고 있다.⁹⁾ 또한 종단의 현황을 상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연락처와 주소 등 몇 가지 종단의 정황을 알려주는 128개 종단의 종명을 소개하고 있다.¹⁰⁾ 종단의 특징을 확인할 수 없는 종단이 128개나 된다는 점은 불교계의 신흥종단이 현재도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라 본다. 이런 현실은 종지종풍에 따라 대중을 구원하는 불교가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파생하는 종단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한국불교의 혼란과 위기의 현실을 잘 반증하는 사회적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기타 한국불교의 주류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각각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종단도 있다. 주로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현재도 일본불교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종단이다. 이미 해방 이전인 1924년경부터 신흥불교종단이 출현하고 있으며, 그들 중에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종단이 등장한다.¹¹⁾ 7~80년대 왜색불교청산운동이나 한·일간에 형성되어 있는 민족감정 때문에 일본의 영향을 받은 종단들이 본색을 감추는 경우도 많다고 보며, 그러한 사례는 주로 법화계열 내

8) 홈페이지에 의하면 1995년 6월 창립. 2012년 4월 2일 현재 42개 종단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9)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2012, pp.24-31.

10)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책, pp.32-36. 종단의 명칭은 너무 많은 관계로 생략한다.

11) 김방룡, 「해방 후 한국불교의 분열과 신생종단의 성립과정」, 『종교문화연구』 제3호, 2001, pp.297-298.

지 신생 종단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종단으로는 창가학회를 비롯해 7개 교단이 있다. 그리고 이들 종단의 대부분은 근대기 일본불교의 제도화 과정 속에서 소외된 신자들이 민중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면서 등장했으며, 현세중심의 구제관과 재가불교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¹²⁾

그런데 이상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현재 한국불교계에는 기성불교를 대표하는 종단 모임인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신흥 종단들의 연합체인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www.kntga.or.kr), 그리고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kbta.cafe24.com)가 있다. 이들의 홈페이지에는 회원 종단의 숫자가 271개 종단과 179개 종단으로 소개되고 있다. 두 협의회에 소속된 종단을 합하면 450개의 종단이 된다. 중복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450여개 종단 이하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의 대표전화로 문의한 결과는 회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대답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불교계는 종단이 亂立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전통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과 태고종이 분화한 이래 수백여개에 이르는 종단이, 짧은 기간에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이한 사회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사상적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종단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최근 등장하는 신흥종단의 종교적 정체성은 의문이 아니 수 없다.

Ⅲ. 종단 난립의 원인과 문제점

1. 종단 난립의 원인

12) 이원범 편저, 『한국 내 일본계 종교운동의 이해』, 제이앤씨, 2008, p.219.

한국불교계에 수많은 신생종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생종단이 급증하는 것은 1988년 5월 28일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전통사찰보존법」이 시행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불교재산관리법」에 묶여 있던 사찰의 매매나 양도 등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종교 법인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후 현재까지 정확한 숫자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종단이 난립하고 있다. 불교계의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6백여 종단이 넘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종단이 파생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 1988년까지와 그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988년도까지는 「불교재산관리법」의 적용 때문에 종단 등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이전에 등장하는 불교계의 신흥 종단은 비교적 창종의 목적과宗旨이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해방 이후부터 1988년도까지 발생한 신흥종단을 이강오나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다면, 사상적 계통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일제 식민지 시대까지 소급해 갈 수도 있다.¹³⁾ 또한 해방 직후 사회적 혼란 속에서 불교의 증흥을 제창하며 새로운 불교운동을 시도한 종단도 등장한다.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불교계 역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해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를 지향하고 등장한 종단이 있다. 진각종, 관음종, 원불교 등과 같은 종단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¹⁴⁾

그렇지만 수많은 신흥종단이 출현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한 것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화라 말할 수 있다. 이 두 종단

13)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조선총독부, 昭和10, pp.472-475. 이강오는 『한국신흥종교총람』, 1992, p.587에서 각세도를 불교계 신흥종교로 분류하고 있다. 이강오의 분류에 의하면 천인도나 천화교는 동학계일 가능성도 있다.

14) 차차석, 「한국불교, 어떻게 개혁을 지향해 왔나」, 『불교평론』 제50호, 2012, pp.25-26.

의 내분과 분열은, 신흥종단이 발생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했다. 특히 조계종과 태고종의 내분은, 이념 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종단이 분열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재산관리법」의 폐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신흥종단은 두 종단의 내부 갈등과 관계가 깊다. 즉 종권에서 소외되었거나 이해관계의 상충, 내지는 계율이나 내규에 대한 문제 등에서 떨어져 나온 승려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종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특히 태고종의 내분 격화와 이에 따른 이해의 상충은 매우 많은 종단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더욱 분화되는 터전이 되었다고 본다.

신흥종단의 출현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기존 불교계의 문제점 극복, 그리고 정치권의 불교정책에 따른 영향이라 분석한 논문¹⁵⁾이 있다. 이러한 분석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시적 차원의 분석이라 평가할 수 없다. 해방 이전 발생하는 신생종단은 그 숫자가 많지 않으며, 이미 해방 이후 독자적인 종단체계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사상적 특징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면 결국 조·태분규로 알려진 근본분열에 원인이 있다.

그런데 조·태분규의 원인은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즉, 遠因은 대처의 허용이라 할 수 있는 식민지 시대의 불교정책과 국가에서 불교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사찰령¹⁶⁾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불교재산관리법의 모태가 사찰령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近因은 비구와 대처의 갈등을 이용한 이승만의 불교분열정책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일반적인 시각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즉, 정교분리의 원칙을 여기면서까지 비구와 대처의 갈등을 부추긴 이승만의 불교정책은 한국불교의 위상을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전통불교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15) 김방룡, 「해방후 한국불교의 분열과 신생종단의 성립과정」, 『종교문화연구』 제3호, 2001, pp.295-296.

16) 김영태, 『태고종사』, 종단사간행위원회, 2006, p.105.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분화된 기성교단은 종권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종권에서 소외된 세력 내지 불만 세력은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결과 새로운 종단을 결성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종지종풍이 조계종이나 태고종과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다. 특히 태고종의 내분은 수많은 신흥종단이 출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화를 거쳤으며, 불교계 내부에서 제2종단이었던 종단의 세력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혹자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기도 한다. 즉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교정화유시라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불교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을 호도했다는 것이다.¹⁷⁾ 이러한 점은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친일세력을 용인한 그가, 유독 불교계의 왜색을 지우기 위해 정화유시를 8차에 걸쳐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가 불교신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기독교신자로서 기독교의 활성화에 막대한 특혜를 베풀었다. 이승만의 불교정책은 기독교 국가 건설이라는 종교정책 위에 전개되었다는 분석¹⁸⁾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 점 역시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비론으로 해석하는 입장¹⁹⁾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물론 필자는 이런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하튼 이승만의 정화유시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든, 그 결과는 참혹했으며,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행종단의 출현 역시 많은 후유증 중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조태분규 당시 조계종에 유입된 무자

17) 이런 입장을 피력한 학자는 부산 신라대 사학과에 재직 중인 조명제이다. 그는 2011년 5월 26일 백련불교문화재단에서 ‘퇴옹성철과 현대한국불교’란 주제 발표에서 상기와 같은 주장을 했다. 『법보신문』 1098호, 2011.5.26. 참조.

18) 김순석,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재발견』, 경인문화사, 2014, p.350.

19) 이재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와 불교정화 운동 전개」, 『대각사상』 22집, 2014, pp.321-328. 필자는 여기서 다섯 항목으로 정리하면서 불교계의 대응방식이나 현실적 상황이 정화유시를 촉발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교분리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정화유시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격 승려들의 양산과 그로 인한 종단의 혼란이 있다면, 또한 태고종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지식인 승려들이 종단을 떠나면서 불교계의 혼란과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1988년 이후 「불교재산관리법」의 폐지는 새로운 불교종단이 출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신흥종단이 증가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등록제로 불교계를 통제하고 있던 법제의 철폐와 신흥종단을 수립하기 쉬운 여건을 제공했기 때문이라 본다. 이런 점은 결속력이 약해진 기존 교단을 탈퇴해 이해를 함께하는 집단들과 함께 새로운 종단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법인격을 갖추고 독자적인 종단을 표방해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흥종단의 출현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또 하나는 불교계의 인사관리나 재무관리가 신흥종단이 증가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보는 점이다. 전통사찰이 아니라 승려 개인이 독자적으로 개척한 사찰도 종단의 종헌과 법규에 따라 종단에 등록해야만 했다. 이런 점은 수많은 사설 사암을 양산했다. 그러나 조계종의 사례를 본다면 종단에 사설사암을 등록하면 창건주라 할지라도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여전이 조계종 내부의 문제이거나 (재)선학원과의 갈등으로 남아 있다. 예컨대 조계종에서 법인관리법이란 종법을 만들어 선학원을 통제하려고 하자, 선학원에 소속된 사설사암은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하게 된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선학원을 탈퇴해 재산권과 사찰 운영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종단으로 사찰 소속을 변경하거나, 이해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흥종단을 표방하는 경우이다.

기타 무속계통의 신흥종단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본다. 이강오의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무속계열의 신흥불교종단의 등장은 그다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종단은 계통이 불분명하며 소규모 종단일 수밖에 없다. 2012년 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에서 주소나 전화번호는

알 수 있지만 종단의 특징을 파악하기 힘든 신흥종단이 128개였다는 점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의 법인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시대적 흐름이 바뀌자 독자적으로 종단을 만드는 일은 더욱 쉽게 되었다. 종단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지어는 종단을 만들어 주는 전문가들도 등장하게 되었다.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승려나 무속인을 상대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특히 추종자가 많은 무속인들이 사찰을 만들어 신행불교종단을 표방하고 있는 경우이다. 무속인이란 신분이 지니는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편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불교라는 종교가 지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즉 개신교나 천주교와 같이 냉정한 이단 논쟁이나 교리의 선명성 논의가 불교계에 선 전개된 바가 없다는 점이다. 특정한 사람들이 삭발하고 승복을 입더라도 그것을 통제할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신흥종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 종단 난립의 문제점

불교계에 수많은 종파가 난립하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국사회의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다. 경제력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사찰을 만들 수도 있으며, 특정 종단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삭발하고 승복을 입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로인한 폐해 역시 적지 않다. 단적인 사례는 다음의 <불교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종단협의 이와 같은 행보는 유사종단 및 유사단체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활동함으로써 불자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종단협과 회원종단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11총선과 12.19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들 단체의 활동이 종단협과 회원 종단, 더 나아가 한국불교의 위상을 실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 단체가 총선과 대선을 맞아 특정 정당이나 이념, 후보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전개한다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종단협 소속 종단과 한국불교 전체에 미치기 때문이다. 종단협은 유사단체의 대표적인 예로 ‘한국불교종정협의회’와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등을 꼽았다.²⁰⁾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먼저, 종단협과 회원 종단에 다른 군소종단 연합체의 활동이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정치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그러한 활동이 한국불교에 긍정적인 작용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불교신문」이 특정 종단의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항변한다면 충분한 반대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교의 율장에 의거해 본다면, 승려는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정 정치집단의 논리를 옹호하는 점은 편견에 빠진 것이라 승려가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 등에서 충분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기사에 나오는 ‘한국불교종정협의회’는 군소종단의 종정들 40여명이 결성한 단체이며, 사단법인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는 단체의 성격이나 구성원들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단체로 파악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한국의 신생 종단들은 이념과 사상에 의해 분과 된 것이 아니라 본다. 특정 그룹의 조직과 인맥, 그리고 재산 때문에 분화된 것이며, 이해가 상충하면 다시 분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속성을 기대할 수 없다. 초기불교 이래 중시하는 계율에 의지하지 않는 한 불교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 소멸되거나 또 다른 이익집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

20) <불교신문> 2012.3.2 박인탁 기자, “불교유사종단 활개 못친다.”

첫째, 지속적으로 신생종단이 등장하더라도, 이들 종단은 대부분 그 정체성이 모호하며, 불교적 가치를 구현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도제양성이나 소속 승려들의 관리 등 체계적인 종단 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특정한 종단을 창립하는 것이 특정한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인 통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동북아불교를 대표하는 새로운 종파의 성립은, 새로운 구원론의 등장과 그 궤적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불교계의 대다수 신생종단은 창종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새로운 이념과 실천방안은 말할 것도 없고 과연 불교적인가 하는 종교적 정체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점을 지울 수 없다. 불교라는 얼굴의 이면에 이기심과 무속이 함께 筋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불교의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히려 한국불교의 무속화를 가속화시키는 동력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둘째, 신도들 입장에서 불교 전반이나 종단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9월 게재된 「현대불교」의 ‘비슷한 종단명칭에 신도들 혼란’이란 기사이다. 이 기사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 등 유사명칭 사용종단이 대폭 늘면서 신도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조계종 등 기성 종단들이 CIP작업 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가 종명에 ‘조계종’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신생종단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 15개 종단(표 참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은, 최근 창종한 ‘조계종 ○○불교’ 쪽에서 승려증 수백장을 발급하면서 승려증 소지자들이 조계종단 소속여부를 파악키 위해 조계종 총무원에 승적조

회를 의뢰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외에도 조계종을, 명칭이 비슷한 종단들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이 총무원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계종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명칭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민·형사상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²¹⁾

유사한 종명을 사용하는 종단이 많아지면서 기존의 교단 역시 다양한 혼란 속에 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사가 작성된 것은 2002년 9월이다. 당시 조계종이란 종명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조계종명을 사용하는 종단이 60여개 이상으로 본다. 이외에도 <불교신문>이나 <법보신문> 등에서 지속적으로 신생종단의 증가와 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설이나 기사가 나오고 있다.

셋째, 신생종단의 증가는 순기능에 비해 불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2002년 문광부 자료에 의하면 불교계의 교직자 수는 41362명이며, 2008년 종교현황조사에 의하면 4940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²²⁾ 6년 동안 약 8천명이 증가했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불교적인 수업을 전문적으로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2012년 발간된 『한국의 종교현황』에 의하면²³⁾ 불교의 교세현황은 137개 종단과 그에 소속된 26791개 사찰, 그리고 46905명의 교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8년도 종교현황조사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파악된 종단만의 교직자 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즉 적어도 5만 명을 전후하는 승려가 한국불교계에 활동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의 대다수는 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니 수 없다. 즉 2012년 문체부에서 발간된 자료에 의하면

21) <현대불교>, 2002.9.18. 김원우 기자, '비슷한 종단명칭에 신도들 혼란'

22) 김웅철, '포교와 신행, 구태를 벗어라', 『불교평론』 42호, 2010, p.300.

2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2012, p.9.

조계종의 승려를 대략 11972명 정도로 보고, 태고종 7898명, 진각종 812명, 천태종 400명, 관음종 780명, (사)대한불교법화종 4000명, 총화종 1806명 등이다. 이들을 합하면 27668명이다. 이외에 종단협에 가입한 종단의 승려 숫자를 합하여 대략 2300명 정도로 추산해도 대략 3만 명 정도 밖에 안된다. 이들은 여하튼 최소한의 불교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전제하더라도 2만 명 이상의 승려 내지 교역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불교적인 교육을 이수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점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표출되고 있으며, 결국 불교계 전체의 대국민적 신뢰성 상실²⁴⁾이란 결과로 나타나리라 본다.

넷째, 불교의 무속화 속에서 사회적 악폐를 양산할 수 있다. 사찰의 간판을 걸고 있지만 내면은 비불교적인 돈벌이에 전념하는 신생종단이 많다는 점은 문제이다. 이들은 사찰이나 포교당 간판을 걸고 천도재나 위패를 파는 돈벌이에 전념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보성 일월사의 위패장사이며, 금년 10월 16일 자 <법보신문>에 실린 ‘코 앞까지 들이닥친 천도재 장사꾼’이란 기사가 이런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V. 나가는 말

이상에서 두서없지만 신생종단의 난립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다. 문제점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다. 아니 기성교단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

24) <법보신문>, 2017.12.20일자. “청주 성폭행 사건, 승려행세 해온 사람”이란 기사에 의하면 ‘청주에서 사찰 주지가 20대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종단협 차원의 조사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사찰을 운영하며 승려행세를 하는 사람’으로 밝혀졌다. 말하자면 사도승이란 의미이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는 한,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 속에서 신생종단의 출현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존 종단들은 종명을 특허청에 등록하고 다른 종단에서 유사한 종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हे프닝이 발생할 정도이다. 그렇다고 사상논쟁을 통해 비불교적인 종단은 불교종단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논쟁의 마당으로 끌어올 강제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신흥종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종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불교계의 언론 역시 감시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필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신흥종단의 출현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측면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불교적 구원의 논리도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그것은 불교교단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증명된다. 예컨대 대승불교도 신흥불교운동이었다. 다만 그것은 불교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대중과 소통하며, 대중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흥종단의 출현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순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한국불교계의 종단난립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종단이 난립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이 이해관계나 기존 종단의 혼란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니 자정기능의 상실이나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지금도 계속 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흥종단을 양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불교라는 종교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종단의 이름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그렇지 않은 종단은 도태할 수 있도록 전불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불교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문광부의 최근의 조사보고서²⁵⁾에 의하면 불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일반 4년제 대학이 4곳, 대학원대학교가 3

25)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책, pp.116-118.

곳, 승가대학이 19곳, 전문교육기관 18곳, 선원 164곳으로 밝혀져 있다. 조계종, 진각종, 천태종 등이 대학이나 대학원대학교를 직간접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타 몇몇 종단에서 불교대학이란 이름 아래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대다수 신도의 재교육기관이며, 전문적인 승려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그나마 이상에서 열거한 대표적인 몇몇 종단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단의 도제양성교육은 유명무실하다. 불교적 가치를 구현할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부실하다는 것은, 종단의 정체성 수호 내지 불교적인 가치의 확장에 적신호라 평가할 수 있다. 조계종을 비롯한 몇몇 거대 종단 이외에 수많은 군소종단을 부정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종단이라 하지만, 불교인지 무속인지 그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 만큼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각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현창하기 위해 무엇 보다 필요한 것은 승려(도제)교육이나 신도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건립하거나 아니면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기성 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와 같이 통제 불능의 상태 내지 자정기능의 불능상태에서 신흥종단의 출현이 지속된다면 한국불교계의 미래는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불교라는 종교의 정체성은 고사하고 무속화 내지 상업화에 휩쓸려 전체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받거나, 사회에 불필요한 종교로 각인될 우려가 있다. 결국 대중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사회적 적폐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념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 김응철, 「포교와 신행, 구태를 벗어라」, 『불교평론』 42호, 2010.
- 차차석, 「한국불교, 어떻게 개혁을 지향해 왔나」, 『불교평론』 50호, 2012.
- 김방룡, 「해방후 한국불교의 분열과 신생종단의 성립과정」, 『종교문화연구』 제3호, 2001.
- 이재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와 불교정화 운동 전개」, 『대각사상』 22집, 2014.
-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조선총독부, 昭和10(1935).
-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람』, 1992.
- 김영태, 『태고종사』, 종단사간행위원회, 2006.
- 차차석, 『중국의 불교문화』, 서울: 운주사, 2007.
- 조기룡, 『종무행정론』, 서울: 동국대 출판부, 2006.
- 『한국불교총람』, 대한불교진흥원, 2008.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2012.
- 이원범 편저, 『한국내 일본계 종교운동의 이해』, 서울: 제이앤씨, 2008.
- 김순석,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재발견』, 서울: 경인문화사, 2014
- <불교신문>, 2012년 3월 2일
- <현대불교>, 2002년 9월 18일
- <법보신문>, 2017년 10월 16일
-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홈페이지/ 29개 회원 종단
-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홈페이지/ 271개 회원 종단
-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홈페이지/ 약 179개 종단

Abstract

An Analysis on the Problem and Cause of Various Religious Orders of Korean Buddhism

Cha Cha-seok
(Prof, Dongbang culture Univ.)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blem and cause of various buddhist orders of Korean Buddhism. Since Korean liberation, new buddhist orders have been made now up to about five hundreds and still continue to increas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social background and cause of increase of Buddhist orders, which were only eighteen before 1988.

The main reason of increase of religious orders may be different by researchers. However, I would like to suggest four elements for it. First, it is the conflict and division between the Chogye order and T'aego order, the representative orthodox orders of Korean Buddhism. Second, it is the fact that it was not difficult to establish religious orders by the asset management law of Buddhism in 1988. Hence, new religious orders increased after then. Third, the asset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s of each religious order is a premodern way. Therefore, the division was made by different perspectives. Forth, the shamanistic buddhist orders gradually increase. The devotees following shamans play a major role to build the new buddhist orders of Buddhism.

The appearance of new religious orders can be understood as a very positive phenomenon in terms of promoting a new Buddhist movement. However, there are also many issues practically. Although there are many newly established buddhist orders, their religious identification is quite

obscure in the point that “Are they the real buddhists?”. Moreover, they may not only make the believers confuse the identification of what the real Buddhism is, but also aggravate the distortion of Buddhism. Furthermore, we may lose the social trust on Buddhism. These problems can give a harmful influenc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Buddhism, so we need to be careful to consider it.

Key words

Buddhist identification, Complication, The law of asset management in Buddhism, The new buddhist order, The policy of religions, Trust, lee seung man, Shamanism, Social distortion, Adverse effect